

‘공돈’ 된 ‘공돈’

공적기금 빼돌리기 갈수록 교묘해져

■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C씨는 다니던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실업급여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아 쟁겼다. 자발적인 퇴사자, 일용직 노동자 모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말이다. 월급을 2곳에서 받는 기쁨도 잠시, C씨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로 적발돼 이미 받은 600만원은 물론 받은 금액 만큼(600만원) 추가 징수될 처지다.

실업자와 노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공적기금 수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부정 수급자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랏돈은 (임자 없는) 눈 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 아래 자행되는 부정 수급행위가 실업급여에서만 몰아 호남권에서 1000명이 넘게 적발됐다. 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서도 매월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전액 환수 당할 처지에 놓인 노인도 광주·전남에서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호남권 실업급여 부정수급 1200여명=지난 8월까지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자 100명 중 2명이 수령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 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호남권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올해 8월까지 1221명 적발

광주·전남 기초연금 수급자 923명 주식 보유 수급 중단

파악됐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호남권 실업급여 수급자 5만8604명 중 2%에 해당하는 1221명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됐다. 부정 수급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돌려받은 반환액은 13억62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 국제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또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제보도 한몫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대표적 사례는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도 꼬박꼬박 실업급여를 타냈다가 이전 회사 동료나 지인의 신

고로 달미를 잡힌 것이다. 이처럼 고용노동청의 ‘신고포상금’ 제도 이용은 올해 8월 기준 18건, 보상금은 880만원에 달했다.

◇비상장 주식 보유 노인 900여명 환수 위기=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노인들은 광주와 전남에 각각 224명, 699명 등 모두 923명이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감시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면서, 지난 8~9월 기초 연금 수급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을 정한 뒤 그간 부정수급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제청 등이 보유한 공적 자료를 통해 사전에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서는 애먼 노인들만 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비상장 주식이 모두 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 보유재산(자산) 현황을 빠짐없이 적도록 안내했다”면서 “하지만 노인들이 다 보니 돈이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은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독감 예방접종자 땀별에 1시간 줄세운 건강관리협회

소음 등 이유 동선 바꿔 혼란 초등생 등 1000명 대기 불만

“초등학생 아이들을 땀별이 내리쬐는 인도에 1시간 가까이 세워 놓아도 되는 건가요.”

지난 29일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가족과 함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를 찾은 A(여·42)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도착한 A씨는 먼저 온 사람들이 많아 당연히 ‘오래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밖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나서야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1도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물 지하에 있는 보건 교육장과 통로에서 시민들을 대기시켰는데 올해는 그늘도 없는 햇볕 아래에 줄을 서게 했다”며 “이날은 다른 진료로 하지도 않았는데 안에 공간을 놔두고 밖에 시민들을 세워두는 게 이해



지난 29일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은 시민들이 땀별이 내리쬐는 건물 밖 인도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독자 제공>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일부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14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협회가 올해부터 대기자들의 이동 동선을 바꾸면서 비롯됐다. 지난 해까지는 내부 통로와 지하 보건교육장에서 대기자들을 기다리게 했지만 올해부터는 내부 소음과 어수선한 분위기 등을 이유로 동선을 바꾸게 된 것이다.

협회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1만6000원으로, 일반 병의원보다 많은 1만원

이상 저렴한 탓에 해마다 이 기간이면 하루 평균 200~300명이 찾고 있다. 이날은 3000명이 넘는 시민에게 ‘알림 문자’를 보낸 탓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동선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큰 불편은 없었는데 이날 1000여 명이 몰리다 보니 장시간 대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독감 예방접종 절차도 복잡해지고, 협회 건물 자체도 협소해 발생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항내 명물 갈치낚시 재개된다

市, 평화광장 앞 해상 한시적 조업 허가...안전대책 마련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광주일보 8월 27일자 7면)된 목포항 내 갈치낚시 영업이 재개된다.

지난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제시한 항내 낚시행사 개최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 조업 허가 방침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업 희망어선 40척 중 허가조건에 동의한 26척에 대해 1차로 낚시어업신고를 수리했다.

시는 조업 허용과 함께 돌고래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질서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통 끝에 합의한 이번 갈치낚시 허가에 앞서 이들 두 기관은 허가 여부를 놓고 미찰을 빚기도 했다. 목포해수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목포항 내 어업활동을 금지하면서 갈치낚시 허용 조건으로 행사 개최 계획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목포시는

행사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시는 개항장 질서 유지와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개항장 내 조업 금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목포는 수상레저를 비롯한 낚시까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많아 그때마다 행사 요청을 받아 허가해 줄 경우 개항장 질서 유지가 더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수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낚시어장인 목포항 평화광장 앞 해상이 ‘대규모 인명사고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낚시는 불법이 됐다며 행사 계획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는 본격적인 갈치낚시 시즌을 앞두고 해수청 방침을 수용하면서 한 달간 지속적인 협거투기가 일단락됐다. 매년 9월부터 2~3개월간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갈치낚시에는 3만여명이 찾아 10억원의 소득을 안겨준 목포의 관광자원이다. /목포=교규석기자 yousou@

18억원대 켓돈 사기

영광경찰, 부부 검거

18억원대 켓돈을 가로챈 계주 부부가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고수의 보장’을 내세운 계조식 유혹에 쉽게 빠져든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경찰은 30일 굴비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원을 모집해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주 A(여·64)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73)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201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속직 ‘변호계’를 조직한 뒤 굴비 유통업자 등 계원들에게 월 400만원씩 2년간 내면 월 96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계원 16명으로부터 15억8000여만원을 받아 켓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지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추석 뒤 쓰레기와 전쟁. 광주 북구청과 용봉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난 30일 오전 용봉동 원룸촌 일대에서 추석연휴 기간 쏟아져 나온 각종 불법 생활쓰레기를 관급봉투에 담고 있다. 북구는 10월 초까지 특별 청소주간으로 정하고 기동반을 동원해 전통시장과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전공노 사무실 폐쇄 통보

정부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했다. 법외 노조인 전공노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4일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비합법 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구급차서 잇따라 출산

○추석인 지난 27일 여수의 40대 산모가 119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등 최근 나흘 사이 광주·전남 산모 2명이 구급차에서 잇따라 아이를 출산.

○3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1시께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에 사는 송모(여·41)씨가 달리는 구급차에서 3.8kg의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았고, 30일 오후 4시께에는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A(여·37)씨가 구급차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

○여수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남소방본부 한선근 구급대원은 “산생아가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와 응급한 상황이었지만 응급처치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할 수 있었다”며 “새 생명 탄생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 있었다”고 설명.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 펜션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청정환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구/벽스바) 서평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120평, 전망최고/4면유리 모든 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7억
- 매매 - 5억 8천만원(법인체 인수 가) 대출 - 3억 6000만원(이자 130만원) 임대 - 보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임대중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최고 수익률!

주인직매 H.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1억원 이상 수익률-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 010-3505-5000